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
강릉시와 강원도 협력 이행촉구 성명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후 경기장 건립, 주변경관 개선, 복선전철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5월 강릉시와 강원도가 체결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강릉시는 토지 보상과 소유권을, 강원도는 경기장 건립사업주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기장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13년 12월, 강원도 빙상경기장 시설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에 따르면 컬링외 모든 빙상경기장 건물과 토지소유권 및 사후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강릉시의회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경기장 시설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2014년 3월 강원도에서 요구한대로 빙상경기장 부지를 강원도로 이관한다는 강릉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강원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의회는 토지 소유권을 강원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릉시가 마치 경기장 사후 관리를 강원도로 떠넘기기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강릉시와 협의한대로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강릉시에서도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협의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장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경기장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강릉시, 강원도, 조직위, 중앙정부 등 모든 기관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와 강원도가 빙상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협의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09. .

강릉시의회